

‘광주·전남 광장’ 출범 來光 이해찬 前총리

“대통합 이루면 호남민심 되찾을 것”

—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모두 안고 가겠다고 했는데 현 정부의 공과 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공으로는 완전 시장경제체제를 만든 것이 가장 크다. 상징적인 것은 공적자금을 받은 대우 건설을 공정한 경매를 통해 더 작은 기업이 금호가 인수한 것이다. 또 평화체제를 마무리하고 특권기관이 없어졌다. 이제 사회가 정상화된 것이다. 경제도 튼튼해졌다. 주가지수와 외환보유고를 봐라. 질적으로 도약한 한 것이다. 재벌급인 한전이 전남으로 오는 것도 과거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나.

잘못된 점으로는 내수활성화를 못해 서민경제가 위축된 것이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내수 및 건설시장이 침체돼 서민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1998년부터 극대화된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했다. 국민정서를 통합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 그런데도 광주·전남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실망했기 때문 아닌가. 또 이에 대해

“광주·전남 한나라 지지는 허수 참여정부 성과는 ‘시장경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여론조사 응답률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80%가 투표의사를 가진 사람인데 20%만 응답하고 나머지 60%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즉 공수 지지자들인 20%만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답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여론조사다. 이것을 반복해서 발표하다 보니 그 현상이 더욱 확산한 것이다. 원래 프랑스 같은 나라는 30% 이하 응답률을 보이는 여론조사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통합이 완성되고 후보가 압축돼 선거전선이 형성되면 응답률은 40~50%에 이를 것이다. 이 상태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신빙성을 가진다. 아마 10월 중순은 봐야 할 것이다.

— 김두관 전 장관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대통령민주신당으로 갔는데.

▲올바른 처신은 아니다. 열린우리당 후보가 모두 만나 당대당 통합으로 가자고 합의했는데 독자 행보를 할 때는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그리고 의미없는 일이다. 국민이 관심을 갖겠나.

— 한나라당이 전 시장이 각종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조사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 후보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현대건설 사장과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자리를 이용해 이권을 추구

친노 진영 대선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지지 조직인 ‘광주·전남 광장’ 출범식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7일 광주를 찾았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범여권은 아직도 대통합을 완성하지 못하는 등 지리멸렬한 상태다. 이 전 총리와 인터뷰를 통해 범여권 대통합 관련 쟁점과 향후 대선 정국 전망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한 것이 밝혀졌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는가. 아직도 지켜보고 있는 60%의 마음은 어찌겠나. 국민은 민주투쟁의 과정을 거쳤다. 지금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다.

—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범여권 후보 중 1위를 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후보들이 비판하는 분위기가. 한나라당이 있을 때는 정체성이 맞지 않으니 나오라고 했다가 나오니까 비판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것 아닌가.

▲나는 손 전 지사에게 나오라고 한 적이 없다. 나오라고 해 놓고 나오니까 비판한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후보가 안될 것 같아서 당을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 국민의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한 교육개혁이 지금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원 정년 단축은 나 아니면 못할 일이다. 당시는 외환위기가 닳고 인터넷이, 영이 다 해서 교육내용과 방법이 변화하는데 65세 정년 보

장으로는 못 따라갈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3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드릴 테니, 그 자리를 젊은 교직자들에게 양보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협상이 안 돼서 법으로 강제할 것이다. 교육은 선생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다. 만일 그 상황이 오면 나는 또 그렇게 한다.

— 한나라당 후보들이 호남고속철 공사를 2년 앞당겨 2013년 개통을 공약했는데.

▲2017년에서 2015년으로 2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다. 재정이 더 도입하면 된다. 그런데 2013년으로 앞당기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기본설계가 2년, 실시설계도 앞당겨서 한 달도 1년, 그러면 3년 걸린다. 공사도 6년 내지 7년 걸린다. 이걸 고속도로와 다르다. 고속도로는 보조도로가 있지만 철도 같은 것은 한 번 닦아놓으면 보수하기 어렵다. 그래서 처음 할 때 기반공사나 정밀공사 완벽하게 해야 한다. 기본설계가 내년이면 끝나고 2009년, 2010년이 실시설계 기간인데 앞당겨서 2009년이면 실시설계를 끝낼 수 있다. 그렇게 2009년 말부터 착공해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가능 여수박람회 꼭 유치해야”

서 2015년, 2016년이면 공사가 끝난다. 조기완공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최대한 토목공사와 설계기간을 줄여서 실시설계에서 1년을 줄이고 토목공사에서 1년을 당긴 것이다. 재원은 용산역 세권 개발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을 2년 더 앞당긴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이다. 선거 때 하는 듣기 좋은 말일 뿐이다.

—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이 경제전문기업을 자처하는데.

▲국가 차원의 경제를 운영하는 것과 사기업 또는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사기업은 이익만 많이 내면 된다. 또 지자체에는 외환이나 수출 분야가 없다. 하지만 국가경제는 이익만 많이 내서도 안 되고 전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나도 (정무부시장을로서) 서울시 운영에 참여해봤지만 국가 경영과는 차원이 다르다. — 전남 지역의 F-1 같은 대형 사업들에 대한 의견은.

▲지금만 것은 여수박람회 유치인데 될 것 같다. 평창이 안 돼서, 평창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대외적으로 호소하기에는 결과적으로 나아진 것이다. F-1은 사업 전망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 있다. 기업체나 후원사들도 달라붙지 않는다. 좀 더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7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가족대표 차성민씨가 서울 신문로 2가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측에 피랍자 석방 호소문을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직접 대면접촉 성사에 주력

■美-아프간 정상회담 후 정부 대응은

탈레반에 ‘자제’ 촉구...아프간 정부와 공조 유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가 20일째를 맞은 7일 정부는 미국-아프간 정상회담 결과가 따른 탈레반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인질사태에 양보했다’는 6일 미-아프간 정상회담 결과가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었다는 점에서 탈레반 측 역시 이를 빌미로 갑작스런 돌발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면서도 탈레반의 태도 변화를 경계하며 직접 ‘협상’을 위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직접 대면접촉 성사에 주력=미-아프간 정상회담이 끝난 후 탈레반 측에서 나온 첫 반응은 한국인 여성 인질과 탈레반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 수감자를 맞교환하자는 제의다.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7일 연합뉴스와의 간담회에서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협조해 수감된 여성 수감자를 풀어주면 같은 수의 한국인 여성인질을 석방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 역시 수감자 석방 관련이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탈레반과의 교섭 채널을 가동, 현실적 요구사항을 제시하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질 사태가 장기화되면 피랍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는 점을 감안, 탈레반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대면접촉 장소에 합의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면접촉에 앞서 한국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인질석방에 대한 대가로 탈레반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실효적 방법’으로는 탈레반이 기반을 삼고 있는 파슈툰족 지역사회에 학교나 병원을 직접 건립하거나 그 비용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아프간 정부 협조 유도=정부는 미-아프간 정상회담이 ‘인질사태 양보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피랍사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두 정부의 직간접적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협력체제 유지에도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아프간 정부와도 유대관계를 공고히 해 탈레반이 인질을 석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탈레반, ‘맞교환 거부’ 강경 대응하나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 6일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양보 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에 따라 탈레반의 대응이 주목된다.

아직 탈레반의 공식 입장이 전해진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속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탈레반 대변인 격인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정상회담 직전 아프간 이슬람 프레스(AIP)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회담에서 인질과 탈레반 수

감자 교환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끔찍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탈레반이 일단은 강경 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탈레반 간 직접 협상의 성사 여부도 다소 불투명해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탈레반의 요구가 한국인 인질과 탈레반 수감자의 맞교환에 집중됐던 점

을 감안하면 직접 협상의 효력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탈레반이 협상 장소를 ‘이유’로 대면 접촉을 지연시켜 온 것도 미-아프간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직접 협상 카드’를 계속 쥐고 시간을 받아가면서 최대한 버티기를 통해 수감자 석방 외에 다른 반대 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1위 광주고시학원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당신을 고충노동 최고의 VIP로 모십니다